

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상용화 속도

국토교통부, 2026. 7. 7.(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업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안전성이 확보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25.11.26)」의 후속조치로, 국제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득하여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 레벨3(유인) :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부분 자율차

레벨4(무인) :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하여 운전자 탑승이 불필요한 완전 자율차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양한 기술 방식을 포괄하는 기준 마련을 위해 총 3차례의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내보다 먼저 레벨4 상용화를 달성한 해외의 허가요건을 참고하여 최소 주행실적 요건을 정하였고 MRC*, 이중화 등 최근 국제기구인 UNECE(유엔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ADS(Automated Driving System, 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의 용어체계를 일부 반영하였다.

* 위험완화상태(Minimum Risk Condition) : 충돌 위험을 줄인 안정적이고 정지된 상태

** 자동차기준 국제조화포럼(UNECE WP.29)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여러 국가의 정부, 관련기관 및 산업·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의 제작·판매를 위한 국제기준 제정(6.24)

그 밖의 ADS 국제기준의 세부내용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여 신속히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소 주행실적으로 1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을 필수 요건으로 마련했다. 다만, 3,000km 이상 주행한 동일 자율주행시스템 및 제원의 차량에 한하여 5대까지 주행거리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율주행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 외에도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비상시 안전하게 정지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였다.

〈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 **(주행실적)** 15,0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만족해야 하며,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이 160km당 1회 이하가 되도록 하는 요건 마련
 * 동일 자율주행시스템 및 제원의 차량은 합산하여 요건 달성 가능(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 **(원격관제)** 비상시 대응(원격 비상정지 등)을 위해 주행 교통상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관제센터-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 구비
- **(안전 설계)**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중화, 탑승객의 비상정지 수단(하차 요청 버튼 등), 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 등 의무화
- **(MRC 전략)** 고장, 운행영역(ODD) 이탈 등 발생 시 원격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경고하고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과 함께 안전하게 정지 필요
- **(사고 대응)** 원격 지원(경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한 운행 보조) 또는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한 안전지대 이동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할 것이며, 그간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되어 온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katri.kotsa.or.kr)에서 7월 7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 수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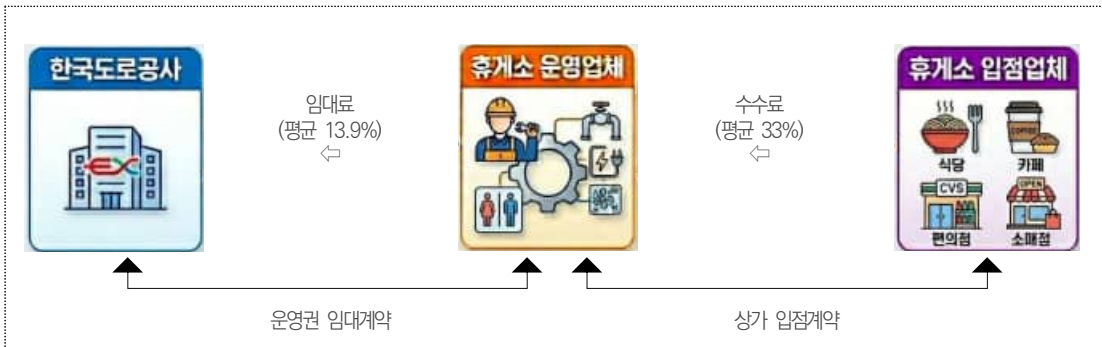
고속도로 휴게소 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 2026. 7. 9.(목)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안고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앞으로는 기분 좋게 머무는 쉼터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었다. 중간에서 새는 높은 수수료율(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



실제로 국민들은 “휴게소는 화장실만 들려야 하는 곳”, “비싸고 맛없는 곳”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 (‘24년 도로만족도조사) “휴게소 음식 비싸다”라는 답변 66.9%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내세워 길게는 40년간 휴게소를 독점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구조적 병폐까지 드러나면서 휴게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고리를 끊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휴게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의

직접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다. 다만, 공공관리회사는 '27년초 설립될 예정으로 올해는 임시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시행한다.

우선, 입점업체 평균 임대료는 중간 수수료를 없애 기존 33%(매출액 대비)에서 8~9% 수준으로(관리비 별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낮아진 임대료가 양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어져 그 혜택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관리비를 감안하더라도 기존 수수료 대비 절반 이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이를 위해 기존처럼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가 아니라 음식 맛과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장하면서도 부담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업체 평가도 매년 시행한다.

한편, 이용객이 많은 휴게소 중심으로 초기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매장'도 운영해 청년 사장님의 첫걸음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휴게소 부지 내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얻는 부가 수익을 휴게소 서비스 개선(예: 냉난방, 공기질 개선 등)에 쓰이도록 하여 더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을 예정이다.

이번 운영체계 개편으로 달라질 휴게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❶ 야간 운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고, 언제와도 식음료 취식이 가능하도록 편의점 내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을 판매하고, 쾌적한 조라·취식 공간도 제공한다.

또한, 일반 매장에서는 당연했지만, 휴게소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편의점 1+1 할인 등 이벤트와 통신사 포인트 적립·사용 등 다채로운 혜택도 확대한다.

❷ 임대료 인하의 효과가 국민께 돌아가도록 좋은 품질의 음식을 시중과 비교해도 부담없는 가격에 제공한다.

특히,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많이 찾는 커피는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높은 임대료 탓에 입점이 어려웠던 실속 커피 매장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평균 4,800원에 달하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2,000원 이하로 부담 없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❸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문 외식 브랜드나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등 이용자가 취향과 수요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간다.

개편된 휴게소는 연내 전국 8개 휴게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공관리회사’ 설립(‘27) 전이라도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도로공사가 올해 신설 및 계약 종료 휴게소 8곳*을 대상으로 7월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나선다.

* (신설) 합천호(상·하행), 월출산 / (계약종료) 여주, 군위, 장유, 대천(상·하행)

한편, 국토부는 휴게소 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철저히 혁파해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휴게소 입점매장 입찰 시 도로공사 현직자와 퇴직자(3년 이내) 및 그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입찰에서 배제할 예정이며, 퇴직자 대상 DB를 구축해 퇴직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자회사 등은 앞으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자회사 등을 통해 이미 운영 중인 휴게소(6곳)도 즉시 매각(매각공고, ~9.30)하도록 도성회 정관을 개정한다.

또한, 지난 국토부 감사결과(5.7)*에 따라 도성회 자회사의 입찰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도성회 회원의 수익금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 도성회 및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 감사(국토부 5.7)

아울러, 공공관리회사 설립 방안도 설립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등을 거쳐 내년 초 출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엔 지친 국민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이어야 하나, 수십 년간 굳어진 불합리한 구조 탓에 비싼 가격과 아쉬운 서비스라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면서,

“연내 개장하는 8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구조는 과감히 혁파하고 그 자리에 오직 국민의 편익만 채워 휴게소를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첫 K-AI 시티, 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 물류기술 현장실증 기회를 연다

국토교통부, 2026. 7. 14.(화)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7월 14일 물류산업의 AI 전환(AI)*을 위해 민간 물류기술의 현장실증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편집중국을 활용한 현장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업무 절차와 운영체계를 혁신하는 전환

최근 물류기술은 자동화 설비를 비롯하여 AI 기반 지능형 운영체계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실제 물류업무 현장에서 성능, 안정성 등을 실증할 기회가 부족하여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우편물류 현장과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첨단 물류기술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와 정책 지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집중국 등 실증 환경 제공,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실증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기업 확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전국 우편집중국 내 일부를 실증 현장으로 활용하며, 기업의 창의적인 제안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지정과제’와 함께 기업이 우편집중국에서 실증을 희망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기업 제안형 자유과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 롤테이너(Rolltainer) 자동 이송 기술, 초소형 소포 자동구분 기술 등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4일(화)부터 8월 21일(금)까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실증계획, 현장 운용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실증사업을 선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시는 미래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물류현장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의 개발과 빠른 현장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스마트도시의 현재와 AI 도시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국토교통부, 2026. 7. 14.(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및 부산광역시는 오는 9월 9일(수)부터 9월 11일(금)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로, 전 세계의 정부·도시·기업·전문가·시민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부산으로 개최지를 변경한 이후 전체 참관객 4만 2,958명, 참가 업체 457개사, 해외 54개국이 참여하는 등 도시와 함께하는 행사로 발돋움하여, 올해 역시 부산에서 두 번째로 개최한다.

행사는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AI) 기조에 맞추어 'K-AI 시티' 정책을 선보이는 첫 무대로, 'Beyond Smart City, Into AI City(스마트시티를 넘어, AI 도시로)'라는 행사 슬로건에 맞게, 스마트시티부터 AI 시티까지 폭넓은 도시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K-AI 시티는 교통시설물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 운영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최적화·지능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모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공모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공동참여)를 선정하여「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시, 개막행사, 콘퍼런스, WSCE 어워즈, 기업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국내외 정부·도시·기업의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글로벌 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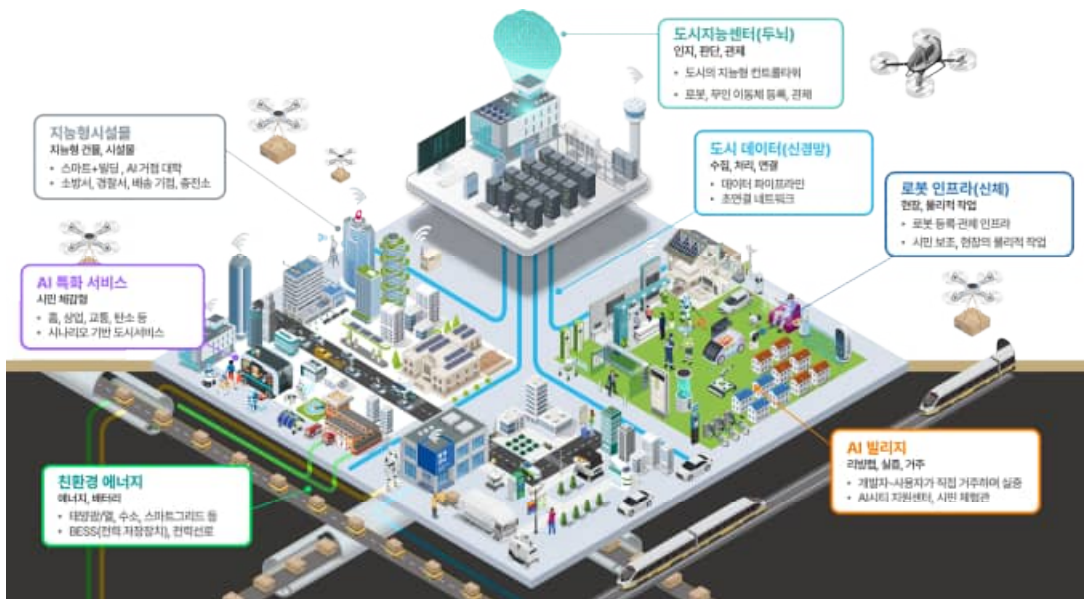
전시 분야는 AI·스마트시티, 건설·인프라, 모빌리티·교통, 에너지·환경 등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특히 AI 특화 시범도시로서 천안·아산과 원주가 AI 시티 공동관으로 참여해 구성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스마트시티와 AI시티, 인공지능(Physical·Agentic AI), 미래 모빌리티 등 글로벌 핵심이제를 중심으로, 'K-AI 도시 정책 콘퍼런스' 등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된다.

또한, 기업의 국내외 성과 창출을 위한 수출·구매 상담회, 대기업 매칭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으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누리집에서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orldsmartcityexpo.com>)

국도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기술을 통해 경험하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국내외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전반에 더욱 큰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



'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속도 낸다 시범운용모델 마련 및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

국토교통부, 2026. 7. 16.(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인 초기 시범서비스 개시를 위한 구체적인 시범운용모델을 수립하고 미래 하늘길을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시범운용모델

국토교통부는 2028년 초기 시범사업의 운용에 대한 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하였다.

이번 모델은 기존 항공체계와의 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조건, 기체 및 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체계, 보험 등 초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을 최초로 구체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지방정부·산업계와 협의하여 2028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UAM 초기 운항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서비스모델) 단순한 운항조건이 가능한 관광형A-A, 지역연계형A-B, 공항연계형A-B 서비스부터 개시하되, 시범운용구역 내로 한정하여 운영

초기 시범운용 서비스모델 유형



〈A to A 모델〉



〈A to B 모델〉

※ **(관광형)** 관광영소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벤티포트 1개를 이용해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순환형(A→A) 운항
(지역연계형) 도서·산간 등 교통취약지역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하나의 거점(A)과 여러 생활거점(B1, B2, B3)을 연결하는 허브형(A→Bn) 운항
(공항연계형)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공항과 도시의 주요지점을 잇는 직결형(A→B) 운항

- ② **(기체 및 감항인증)** 해외 형식증명(TC),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및 표준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체로 한정하고, TCV 완료 전 기체는 확인절차를 거쳐 실증 시험운항 중심으로 운항 허용
- ③ **(운항방식·조건)** 조종사가 탑승하여 일출~일몰 사이에, 시정 5km·운고 450m 이상 조건에서 1개 회랑에서 1대만, 1일 편도 10회 이하 운항
 -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50km(편도) 이하로 한정
 - * UAM이 정해진 폭과 고도 안에서 운항하도록 미리 지정한 하늘의 운항구간
- ④ **(종사자·사업자)** 기존 조종사·정비사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기체의 제작사 교육 훈련을 통과한 경우 초기 운항·정비 관한 특례 부여
 -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기체운영)는 기체 1대 이상,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 자본금 7억 5천만원 및 운항증명* 취득을 필수요건으로 적용
 - *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 UAM을 운항하려는 사업자가 안전운항에 필요한 인력·장비·절차를 갖췄는지 정부가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
- ⑤ **(관제·벤티포트)** 관제구역에서는 기존 관제기관(국토부, 군 등)이 관제 수행, 비관제구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관제)가 비행정보 제공
 - 필수시설(이착륙구역, 터미널, 충전 등)을 갖춘 벤티포트 설치 의무
- ⑥ **(보안·보험)** 보안은 신분확인, 위험물 소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적용, 보험은 책임보험(사망·후유장해 1.5억원, 부상 0.3억원, 물적손해 10억원) 의무

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운항범위를 넓혀 나간다.

시범운용구역, 운항거리 50km, 조종사 탑승 필수 등의 기준은 운항조건을 단순화하고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기 운항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운항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초기 UAM은 공역, 관제 등 기존 항공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운항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UAM에 적합한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운용을 통해 축적한 운항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항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UAM이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제1호 UAM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또한,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함께, 2028년 UAM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초기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UAM 최초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 분야이며, 향후 운영 목적에 맞추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부문별 맞춤형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입과 및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실증·시범 운영의 초기 조종사·정비사로 참여하고 국내 UAM 자격체계 및 안전기준 구축 시 초기 교관 및 자문 자격으로 제도 마련과정으로의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선발규모와 훈련시기 등에 대해 기체 제조사 및 관계기관·산업계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선발된 인원들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모두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사업 파트너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6. 7. 30.(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사업 수요기관(지방정부 등)과 공급기업(기업·대학 등) 간 양방향 매칭 서비스('스마트도시 오픈랩')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스마트도시 종합포털(www.smartcity.go.kr)'을 전면 개편한다.

'스마트도시 종합포털'은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제품·솔루션에 대한 정보와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는 포털이다. 이번 포털 개편을 통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방정부-기업 간 온라인·양방향 매칭 서비스('스마트도시 오픈랩')를 도입하고, '솔루션 마켓'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4~'28) 3-③ 민간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스마트도시 오픈랩'은 개방형 매칭 플랫폼으로서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① (G2B) 지방정부는 도시 내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랩'에 수요과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스마트도시 기업은 보유한 기술·서비스를 소개하고 협업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B2G)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도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장소가 필요하거나 도시데이터(교통 관제, 안전 분야 등) 사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상황을 '오픈랩'에 등록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협업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③ (B2B)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융·복합 서비스를 기획(컨소시엄 구성)하는 경우에도 '오픈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기업 간 매칭을 지원한다.

또한, '솔루션 마켓*'의 경우 특정 주제에 맞는 제품을 선별하여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시를 설명하는 '큐레이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온라인 전시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강화한다.

*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솔루션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공간

이와 더불어, 해외 수요기관에서도 국내 기업의 제품·솔루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솔루션 마켓' 영문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UI 개편과 함께 검색 기능 추가, 메뉴구조 체계화 등 편의성 기능 강화와 시스템 환경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